

## 개혁주의 관점에서 본 고교 평준화 정책

강영택

### 1. 서론

고교 평준화 정책은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논쟁거리를 가장 오랫동안 제공한 정책 중 하나이다. 1974년 우리나라에 고교 평준화 정책이 처음 실시된 이후 주기적으로 이 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이루어졌왔고, 실시 30주년이 되던 2004년 우리 사회는 다시 이 문제를 두고 찬반 양편으로 나누어져 뜨거운 논쟁이 일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문제는 학문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보다는 이데올로기적 쟁론의 대상으로 그 성격이 변하고 있는 듯하다. 즉, 고교 평준화 정책의 유지와 폐지를 두고 이데올로기 상에 진보와 보수적 성향의 편가르기를 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언론에 나타나는 많은 주장들이 정확한 실증적 근거를 결여한 채 정서적 논의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생산적인 토론이 되지 못하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끝나곤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어떤 측면에서 이루어지든 보다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만 한다.<sup>1</sup>

고교 평준화 정책은 기독교교육의 관점에서조차 진작에 분석되고 논의되었어야 하는 주제이다. 그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함 때문만이 아니라 기독교교육의 핵심적인 주제인 부모의 교육권과 교육적 평등권과 깊은 관련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적 관점으로 교육 정책을 논의한다고 해서 특정 이데올로기에 편향된 이들이 하듯이 정책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무시하고 자신의 주관적인 관점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에서는 학문 활동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학문 영역의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르친다. 즉, 인간의 이성에 근거한 학문의 과학적인 방법론이 갖는 한계가 분명함을 인정하면서도 과학적인 방법론은 이 세계의 많은 진실을 밝혀내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또한 주장한다.

이 논문은 고교 평준화 정책을 개혁주의 신학의 토대 위에서 평가하여 그 정책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혁주의 신학의 토대’라는 표현은 그 강한 어감과는 달리 유별난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다. 이는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논의를 논자의 강한 주관성에 의지하여 감정적으로 다루기 보다는 보다 논리적이고

---

<sup>1</sup> 학문의 과학적인 방법이 순수 객관적일 수 없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학문으로서의 엄격성을 유지해야 한다.

과학적으로 다루겠다는 표현이고, 정책의 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그것이 추구하는 가치들을 평가할 때 개혁주의의 준거들에 의존하겠다는 표현이다.

이 논문은 먼저 고교 평준화 정책이 야기한 쟁점들이 무엇인지 정리한 후, 이 쟁점들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을 간단하게 살펴볼 것이다. 이 작업은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많은 주장들이 심정적, 이념 편향적 주장인지 논리적, 과학적 근거를 가진 주장인지 분별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평준화 정책의 주요 쟁점들을 개혁주의의 관점에 의거하여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 논의에 앞서 개혁주의 신학이 제시하는 교육적 준거들을 형성하기 위하여 교육에 대한 세가지 원리를 제시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논문은 최종적으로 개혁주의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고교 평준화 정책이 어떤 변화를 가져야하는지 제안하게 된다.

## 2. 고교 평준화 정책의 쟁점들

고교 평준화 정책을 교육의 수월성 혹은 효율성을 지향하는 교육적 가치와 교육의 평등성을 지향하는 교육적 가치의 갈등으로, 또는 교육의 이해관계자들의 정치적 대립이란 측면에서 보는 견해가 많다 (김달효, 2003; 이주호, 2002; 임준희 2006).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고교 평준화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측면들을 경시하게 할 뿐 아니라 자칫 정책에 대한 논의를 이데올로기적 논쟁이나 정치적 싸움으로 몰고 갈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이 정책에 대한 논의는 보다 총체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먼저 평준화 정책에 대한 지금까지의 여러 주장들과 그 주장들을 배태하고 있는 논리구조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 정책으로 학교 교육이 획일화 되었고, 학교의 자율성이 상실되었으며,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으며, 학급 내 학습 집단의 이질화로 수업 능률이 저하되어 사교육이 증가하게 되었고, 경쟁의 상실로 학력이 하향 평준화 되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데도 불리할 뿐 아니라 학교의 전반적인 위기를 가져왔다고 말한다 (김동석, 2002; 김영철 2005; 김태종 외, 2004; 이주호, 2002). 반면에 이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고교 평준화 정책으로 과열 입시 경쟁이 극복되어 학교 교육이 정상화 되었고 고입 재수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고등학교 간의 격차를 줄여서 학교 서열화에 따른 위화감과 열등감을 방지할 수 있으며, 교육기회의 평준화를 이루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강상진, 2005; 강영혜, 2005; 김동석, 2002; 성기선, 1999).

이들 주장들은 각기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구조를 지니고 있다. 평준화 정책의 반대론자들은 대개 시장 경쟁의 논리, 학교 선택의 논리, 교육 수월성의 논리 등에 터하여 자신들의 주장들을 펼친다. 즉, 경제적 시장 질서를 규율 하는 자유 경쟁이 사회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 역시 교육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학교 선택은 자유주의 사회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향유해야 하는 기본적 권리로서 이를 제약하는 평준화 정책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점점 치열해지는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수월성을 최우선 순위로 해야 되며, 교육의 수월성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교육의 기회를 적절하게 주어질 때 얻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논리구조로 볼 때 학교간, 학생간 경쟁을 억제하고, 학교 선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며, 교육 수월성을 무시하는 고교 평준화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평준화 정책의 지지자들은 시장 경쟁이 아닌 교육적 경쟁의 논리, 학교 단위 선택보다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한 선택의 논리, 교육 평등성의 논리를 중시한다 (김동석, 2002). 즉, 이들은 교육에는 일반 시장과 달리 윤리성과 사회 복지가 중시되며, 교육 서비스는 공공재의 성격을 띠므로 시장 경쟁이 아닌 다른 차원의 경쟁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학교 선택은 한국적 상황에서 유능한 소수에게만 양질의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므로 가능한 다수의 학생들에게 최선의 교육적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의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평준화 해제를 통한 수월성 추구는 다수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지는 소수의 수월성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특성적 능력과 수월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이상 평준화 정책에 대한 양편의 주장은 각기 나름의 타당한 논리적 구조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교육 정책은 이념적, 논리적 타당성과 함께 교육 현실에서의 실제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정책으로서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김동석, 2002). 그러므로 여기서는 위에서 제기하는 주장들이 어느 정도 실제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에서 평준화 정책을 논의할 때 항상 중요하게 대두되는 네가지 주제들 즉, 학력의 하향 평준화, 학교 선택권, 학교의 자율성, 교육의 평등성 등을 검토하려고 한다.

먼저, 평준화 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큰 논쟁이 되는 부분이 이 정책으로 학생들의 학력이 하향 평준화 되었는가 하는 부분이다.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되는 것과는 달리 평준화 정책이 학력의 하락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김태중 외, 2004).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한국개발연구원 (KDI) 김태중 등(2004)의 연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01 년도 국가수준 교육성취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할 결과 학생들의 성적 수준에 관계없이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이 평준화 지역 학생들에 비해 약 0.3 표준편차만큼 높은 학업 성취 수준의 향상을 가져왔다고 보고하고 있다.<sup>2</sup> 그러나 그들의 연구는 대도시 학교를 표본에서 제외함으로 표본의 대표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고 (이광현, 2005), 동일한 학생들의 성적의 변화를 추적하는 종단적 연구가 되지 못하고 동일 지역 다른 학교의 학생들의 학업 성적을 비교함으로 자료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류한구, 2005).

반면 평준화 정책이 학생들의 학력 저하와 관련이 없거나 오히려 학력을 상승시킨다는 실증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 (강영혜 외, 2005; 류한구, 2005; 성기선, 1999; 2002; 이광현, 2005). 성기선 (1999; 2002)은 전국적으로 시행된 대학수학능력모의고사 자료를 이용하여 고등학교 1 학년부터 3 학년까지의 종단적인 연구를 한 결과 전체적으로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학생의 학업 성취도 향상 정도가 비평준화 지역 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나거나 또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단지 고등학교 1 학년 당시의 성취도 수준이 평균보다 2 표준편차 높은 성적 상위자 학생의 경우에서만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성취도 향상 정도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성기선, 1999). 그러나 성기선의 연구는 사설학원 모의고사 성적 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표집의 구성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된다 (류한구, 2005). 3 년에 걸쳐 대대적으로 시행한 교육개발원의 “고등학교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함께 사용하여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 고등학교들의 일반적 특징과 차이점을 심층적, 다면적으로 평가하였다 (강영혜 외, 2005; 윤종혁 외 2003; 윤종혁 외 2004). 이 연구의 결과는 고교평준화 정책이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평준화 지역 학교와 비평준화 지역 학교들 간에 수업방식이나 교사들의 만족도 등에 있어 질적 차이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참고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학생의 가정 배경과

<sup>2</sup> 이러한 성적 향상의 크기는 상위 20% 수준의 학생을 1 년만에 1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정도라고 설명한다 (김태중 외, 2004).

입학시점의 성적 수준으로 나타났다 (강영혜 외, 2005). 이러한 연구 결과는 미국의 경우 (Chubb & Moe, 1990)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평준화 정책과 학업성취도의 관계에 대하여 이처럼 서로 상반된 실증적 연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확실한 근거가 아직 불충분한 현 상황에서 고교 평준화 정책이 학력 저하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이 정책이 수업의 능률화를 가로 막고 있다거나 교육의 수월성을 성취하기 어렵게 한다고 주장할 실증적 근거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sup>3</sup> 또한 학력 저하에 대한 논의에서 학력을 시험지로 평가하는 전통적 학력관에 매여있기 때문에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보다 건설적인 제언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기도 한다 (성기선, 2005).

다음으로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과 학교운영의 자율성 문제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 31조 제 1항은 국민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교육받을 권리란 ‘교육내용 선택, 결정권,’ ‘교육내용 요구권,’ ‘교육기회 접근의 선택권’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병환, 2002). 평준화 지역에서의 학생들은 근거리 학군에 따른 배정 방식으로 학교가 정해지므로 학교 선택권이 절대적으로 제약을 받는 반면, 비평준화 지역에서의 학생은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학교를 지원함으로써 학교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광현 (2005)의 연구는 이러한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평준화 정책이 실제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PISA 자료를 이용한 그의 연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 학교 가운데 비평준화 지역 학교 학생들 중 37% 학생만 학업적인 이유로 자신이 직접 학교를 선택했다고 답했다. 반면 평준화 지역 학교의 학생들 중 29.4% 학생들도 거주지 선택 (Residential Choice)등을 통하여 학교를 선택하였다고 답했다. 이러한 근거를 들어 그는 학교 선택권의 행사를 이유로 평준화 정책의 존재를 논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참고로 이광현 (2005)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은 평준화 지역 여부 변인이 아닌 부모의 사회경제문화 지표와 학생의 학업기대수준 즉, 대학 및 대학원 진학을 위한 학업목표 등과 유의한 정(正)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광현, 2005). 이광현의 이런 연구는 학생, 교원, 학부모 20,000 명을 대상으로 한 강영혜 (2005)의 설문 조사의 결과와 유사하다. 강영혜의 연구에 따르면 오히려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선택권과

---

<sup>3</sup> 이혜숙(2006)은 그의 질적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평준화/ 비평준화 학교에 관계없이 학생들의 수월성을 담보하는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한다. 이유는 대부분의 수업이 대학입시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관련하여 더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평준화 지역: 31.6%, 비평준화지역: 37.7%). 이는 학생 성적에 의해 고교 진학이 결정되는 비평준화 지역의 현 상황에서는 평준화 정책 여부가 학교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결정적 요소가 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 운영의 자율성 문제 역시 고교 평준화 정책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당위적 차원의 논의가 주를 이룬다 (김영철, 2005; 이병환, 2002). 김영철 (2005)은 평준화 정책의 실시로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제한되었고, 사학의 자주성과 자율성이 크게 위축되었다고 전제하고 있지만, 평준화 정책이 학교운영의 자율성 위축의 원인임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반면, 교육개발원의 최근 연구는 평준화 지역 학교와 비평준화 지역 학교들 간에 교사들의 교수 방법, 교육과정 운영 등에 별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강영혜 외, 2005). 이혜숙 (2006)의 질적 연구 역시 평준화 정책 실시 여부나 동질 학생 집단 여부가 학교의 수업방식이나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태도 등을 결정하기 보다는 입시에 대한 준비, 교사의 교과 및 학생 장악력 등이 더욱 중요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다양성을 갖추지 못하는 이유가 고교 평준화 정책 때문이라기보다는 대학입시의 영향 등 다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경우는 분명히 평준화 정책 실시 이후로 사학의 자율성이 심하게 제약되고 있음은 사실이다. 학생 선발, 교육과정 운영, 등록금 책정 등 학교 운영의 중요 정책에서 학교의 자율적 결정에 따르는 대신 정부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처지에서 고유한 설립 이념을 따라 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학은 그것을 가능케 하는 기본 조건인 학생 선발권과 교육과정 편성권이 없어 학교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교육권의 평등성 문제이다. 고교 평준화를 실시했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교육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이 정책의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평준화 정책 이후 학생들에게 교육적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졌는가? 이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은 긍정과 더불어 의문을 제기한다. 고교 평준화 정책 실시 이후 고등학교 교육기회가 급격하게 확충되었고, 평준화 지역에서는 고등학교들 간의 서열이 사라지고 학교간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강상진, 2005; 류한구, 2005). 이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인 학교 서열화로 인한 위화감 조성이나 학벌주의, 연고주의의 폐단을 약화시키는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대도시 학교와 농어촌 학교 간에 여전히 존재하는 교육적 자원의 질의 차이 (이광현, 2005)는 고교 평준화 정책으로 일부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적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더구나 앞에서 밝힌 대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학교 선택권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로 볼 때, 교육권의 평등은 고교 평준화 정책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 학생들의 학교 선택과 학업 성취도가 중요하게 영향을 받는 현 상황에서 교육 평등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교 평준화 정책과는 별개의 논의와 정책 수행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sup>4</sup>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지금까지의 활발했던 논쟁을 생각 할 때, 의외로 이에 대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적은 것이 사실이다. 가장 많은 논란이 되었던, 평준화 정책이 학생들의 학력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그 관계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학교 선택권의 제약과 학교의 비자율적 운영이 평준화 정책의 결과라고만 단언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 연구들은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교육평준화 정책이 교육의 평등을 이루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도 긍정과 부정의 답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평준화 정책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은 실제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논의 되어왔던 고교평준화 정책을 개혁주의의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개혁주의 신학을 토대로 교육에 대한 개혁주의 준거들을 도출하기 위해 몇가지 교육적 원리들을 제시하고자한다.

### 3. 교육에 대한 개혁주의 준거들<sup>5</sup>

개혁주의 신학에서 하나님 나라와 언약 사상은 핵심적인 주제가 된다 (Christian Reformed Church, 1987; Glassford, 1991; Jaarsma, 1953). 하나님 나라는 신구약 성경

---

<sup>4</sup> 아동의 가정 배경이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방식은 다양하겠지만 대표적으로 사교육비 지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교평준화 정책이 사교육비 지출을 증대시켰다면 교육평등화와 반대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현진과 최상근 (2004)의 실증적 연구는 일부 사람들의 주장과는 달리 평준화 정책이 직접적으로나 학교불만족 변인을 통한 간접적 방식으로나 사교육비를 증대시켰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보고하고 있다. 참고로 그들에 따르면, 사교육비 지출에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요소는 학교에 대한 불만족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였다.

<sup>5</sup> 이 부분은 필자의 다른 논문 Kang (2006)을 참고 하였음.

전체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성경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하다. 하나님 나라는 피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통치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 나라는 “구약성경에서는 희미하게 나타나고, 신약성경에서는 그리스도에 의해 분명하게 선포되고 시작된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경험되어지며, 온 인류 역사가 향하여 움직이는 미래의 희망이다”(Glassford, 1991, p.42). 언약 사상은 창세기를 통해 뚜렷하게 나타나고 신명기에서 재차 강조되고 있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간에 맺어지는 관계성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개념이다.

이 두 가지 사상은 교육을 논의하는데 중요한 원리들을 제공한다. 즉 하나님 나라 사상은 교육과 신앙의 불가분의 관계성을 제시하고, 정의를 향한 교육의 목적을 정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언약사상은 교육의 일차적인 권위와 책임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아래에서 상술할 세가지 원리들은 사회의 공공 가치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도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1) 신앙과 교육의 통합적 관계

하나님 나라 사상은 신앙, 생활, 사회 등이 어떻게 상호 관련을 맺는지를 보여준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이란 고백은 우리의 모든 사회와 생활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야 함을 알게한다. 즉, 교육활동을 포함한 우리의 생활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한다는 것이다.

북미 기독교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인 ‘오늘날의 증언’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 개념은 기독교교육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초를 제공한다. “우리의 세계는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께 속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화적 사명의 일부로서 교육적 과업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사회의 각 영역에서 모든 직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살도록 교육해야 한다” (Christian Reformed Church, 1987, p.82).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들의 신앙을 삶의 모든 영역에 통합하도록 요청한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특정 교리를 받아들이거나 기도, 성경 읽기, 교회 출석 등과 같은 종교적 행위에 참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Wolterstorff, 2002). 대신 그것은 기독교적 방법으로 그의 전 생애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교육 활동 역시 매우 중대한 종교적 행위가 되는



셈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학생은 자신의 종교적 가치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배울 수 있어야 하며, 교사는 순수 객관적일 수 없는 교과 지식을 자신의 세계관에 입각하여 교육할 수 있을 때 종교적 자유는 온전히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학생과 교사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그 사회가 수용하는 공공적 가치와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이다.

## 2) 부모의 권위와 책임감

하나님 나라와 더불어 언약은 개혁주의 신학의 주요 특징이다. 창세기 17 장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는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 (창 17:7-9). 그 언약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자녀들을 가르칠 의무를 지닌다. 즉,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바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다. 신명기 6:4-9는 부모들이 그들 자녀들에게 언약 진리를 가르쳐야 하는 의무를 분명히 한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신 6:6-7). 즉, 언약 개념은 자녀들을 가르칠 권위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준다.

언약 사상은 개혁주의 기독교학교의 초석이 된다 (Jaarsma, 1953; Christian Reformed Church, 1987; GRCSA, 1997). 개혁주의 신학자인 루이스 벌콕은 언약 사상과 기독교학교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 상술하고 있다. 그는 왜 신자들이 언약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기독교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다음 세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와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입되었다. 둘째, 기독교인 부모의 자녀들은 언약적 약속을 유산으로 받는다. 셋째, 언약적 약속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부여한다 (Jaarsma, 1953).

개혁주의 기독교학교인 그랜드래피즈 기독교학교 정책 문서는 “언약은 그들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들에 의해 동의된 관계이다. 그것은 기독교인 부모들의 자녀들이 그들 부모들의 역할에 대한 헌신에 의해 체결되는 동의이다” (GRCSA, 1997, P.3) 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 문서에 따르면, 언약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기독교교육을 제공하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책임지는 교육의 주체는 부모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래서 개혁주의 기독교학교의 오랜 역사 가운데서는 부모 운영의 학교가 중요한 특징이 되고

있다 (Vryhof, 1994). 그들에게 있어 기독교학교는 부모들이 집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하나님 중심의 교육을 부모가 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 되고 있다.

### 3) 학교 교육의 목표로서의 정의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살림이 있다. 살림은 성경적 의미의 정의와 평강이며, 그것은 하나님, 자신, 이웃, 자연과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충만한 기쁨 가운데 실재하는 것이다 (Wolterstorff, 2004). 살림에 대한 이해는 학교 교육의 목표를 분명히 해준다. 이 원리는 개혁주의 철학자인 월터스토프의 사상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그는 살림의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정의를 위한 교육을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정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구약 성경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동체 생활에서 안전한 터전을 부여 받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고아, 과부, 나그네들은 종종 이스라엘에서 그들의 권리를 확보하고 누리기 어려웠다. 그래서 월터스토프는 “소외된 자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을 때에만 정의가 있다” (Wolterstorff, 2004, p.143) 고 말한다. 정의의 관점에 기초할 때, 학교가 가르쳐야 하는 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이 “정의롭게 행동하고 불의에 대항하며 정의를 위해 고민하도록 (p.143)” 하는 것이다. 실제 많은 북미의 개혁주의 기독교학교들은 살림을 추구하고 있고, 이를 통해 세계의 상처를 치유하며 세계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한대로 회복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Stronks & Bromberg, 1993).

### 4.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개혁주의적 평가 및 제언

개혁주의적 관점은 고교평준화라는 복잡한 정책적 사안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유용한 하나의 준거틀을 제공해준다. 먼저, 신앙과 교육의 통합적 관계라는 원리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신앙이 학교 교육의 모든 영역에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침에 따르는 학교로서는 불가능하다. 신앙의 입장에서 교육을 하기 원하는 구성원들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학교가 필요하며, 학부모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그러한 학교를 선택하게 될 때 신앙과 교육의 통합의 길이 열릴 수 있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의 고교평준화 제도는 분명히 대폭적인 수정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학생들을 임의 배정하는 현 제도 하에서는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적 이상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학교의 특정한 이념에 따른 자율적 운영이 어렵게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앞의 논의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교평준화 정책의 존재 여부가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학교 선택권을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비평준화 지역에서의 많은 학교들이 평준화 지역 학교들과 별 차별성이 없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학부모들의 학교 선택에 대한 불만이 평준화 여부에 관계없이 나타나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의 자율성과 학교선택권을 이용하여 신앙과 교육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와 더불어 신앙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교육 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학업 성적 외에 신앙적 교육 내용을 이유로 학교를 선택하는 교육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개혁주의의 두번째 원리인 부모의 교육적 권리와 책무성 역시 부모의 학교 선택권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하나님께서 자녀 교육의 최종적 책임을 국가가 아닌 부모에게 맡기셨다는 개혁주의적 신앙고백은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강한 책임의식과 동시에 교육적 권리를 내포하고 있다. 부모의 교육적 권리에는 교육내용 선택, 결정권과 교육 내용 청구권 등이 포함된다.<sup>6</sup> 오늘날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에 대한 강조는 경쟁을 통한 학교교육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학교 선택에 대한 모든 주장이 동일한 철학적 배경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벨기에 같은 나라에서는 신자유주의 사조와 관계없이 부모의 자연법적 권리를 중시하는 전통에 의해 부모들에게 학교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Plank & Sykes, 2003).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녀에 대한 교육적 권리와 책무성을 수행하는 과정으로서의 학교 선택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학교선택과는 그 양상에서 차이가 있다. 하나님의 언약 자녀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성경적 가르침을 교육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여 그곳에 자녀를 보내는 것은 부모의 책무성의 발로이다. 그들에게 학교 선택의 주요 기준은 학교의 교육목적과 내용이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학교선택이 교육의 목적이거나 내용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업 성취수준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어떤 이는 한국에서의 학교선택권 문제는 교육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 범주에 넣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평가기도 한다 (류한구, 2005). 그러므로 개혁주의 두번째 원리가

---

<sup>6</sup> 독일의 경우, 부모의 교육권에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사이의 선택권, 공립학교 제도내의 다양한 학교유형 사이의 선택권, 종교 수업에 학생의 참석 결정권 등이 포함된다 (허종렬, 1994).

성취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학교 선택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뿐 아니라 학부모의 선택 동기가 신앙적, 신념적이 되도록 인도되어야 하고, 그들이 선택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내용을 가르치는 학교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존속과 폐지 이상의 문제이다.

개혁주의 셋째 원리인 학교교육의 목적으로서의 정의라는 원리는 교육평등성을 강조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는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누릴 수 있어야한다. 이러한 권리의 향유는 아동들이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최적의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고교평준화 정책이 도입된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공평한 교육적 기회를 가능한 많은 아동에게 주기 위한 것이었다. 평준화 정책으로 학교간의 격차가 일정 수준 해소되고 있고 그로 인해 사회적 위화감의 문제나 권력 집단의 편중 현상이 완화 되는 등 사회정의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김달효, 2003).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오히려 더욱 심화되고 있는 교육불평등의 문제 역시 존재한다. 도시와 농어촌 학교의 교육적 자원의 질에 차이가 존재하고, 일반적으로 아동의 학업성취도와 가정 배경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동의 학업 성취도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현상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현상이 고교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김달효, 2003; 김현진, 최상근, 2004) 고교 평준화 정책이 이런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교육불평등에도 불구하고 고교평준화 정책이 우리나라의 교육 평등성 확산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해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개혁주의 세번째 원리에 의할 때 평준화 정책의 존속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요약하면, 개혁주의 두 가지 원리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폐지 혹은 수정의 필요성을, 세번째 원리는 존속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위에서 제시한 개혁주의 준거들은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해 단순히 지지 혹은 반대의 입장을 취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고교평준화 정책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 교육 평등성의 향상은 그 정책의 존속을 주장하는 근거로 작용하지만,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학교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 평준화 정책의 요소들은 개혁주의 교육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관점에서 볼 때 고교평준화 정책을 단순히 찬성 혹은 반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듯하다. 그보다는 개혁주의 원리들이 지향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평준화 정책이 어떻게 변모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보완 장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지금까지의 토의를 토대로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몇가지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립학교들 가운데 자원하는 학교에 한하여 평준화 제도로부터 벗어나게 할 필요가 있다. 즉, 종교적 신념이나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사립학교에 대하여 교육과정 편성권, 학생 선발권을 포함한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해야한다.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그에 대한 책무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과열적 교육 상황을 고려할 때 구별되는 교육 내용을 결여한 채 단지 성적 우수자 선발만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평준화 정책하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일부 사립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조건부 평준화 정책의 완화를 제안하는 바이다.

둘째, 지역간 학교 교육 자원의 질에 차이가 있는 현 상황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낮은 수준의 학교에 배정되는 것은 교육의 형평성에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평준화 정책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교간 교육적 자원의 질을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학교, 도시 변두리 학교, 신교육소외층인 외국 이주 노동자, 북한 이탈주민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등에 집중적인 투자가 있어야한다.

셋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동의 학업 성취도에 점점 강하게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평준화 정책만으로 교육평등성을 보장하기 어렵게 되고 있다. 그러므로 평준화 정책의 보완책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의 아동들에게 정부의 보조금에 의한 개인 교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sup>7</sup>

## 5. 결어

본 논문은 우리나라 교육 정책 중 가장 많은 논란이 있어왔던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개혁주의적 관점에서의 평가를 시도해 본 글이다. 교육을 보는 개혁주의적 준거틀을 형성하기 위하여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 주제인 하나님 나라와 언약 사상을 토대로 세가지 교육의 원리들을 도출하였다. 교육활동과 신앙적 관점의 통합,

---

<sup>7</sup> 미국의 바우처 (Voucher) 제도를 변용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오하이오주 클레브랜드의 바우처 제도는 빈곤가정의 아동들이 자기의 학군 이외의 학교를 선택할 때 바우처 (국가보조금)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자기 학군의 학교에 남을 경우 바우처를 이용하여 개인교습을 받을 수도 있다.

교육에서 부모의 책임과 권위, 학교교육의 목적으로서의 정의 등이 고교평준화 정책을 평가하는 개혁주의의 준거틀로서 제시되었다. 개혁주의 준거틀에 의한 평가에 앞서 평준화 정책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을 검토하여 정책의 실제적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평준화 정책에 대한 연구들은 정책이 학생들의 학력 하향에 영향을 주었다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더구나 학교 선택과 학교의 자율성에 대해서조차도 학교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대학입시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평준화 정책 여부가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연구들은 또한 평준화 정책이 교육평등성에 일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평등적인 요소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음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실증적 연구들을 살펴볼 때 단순히 평준화 정책의 존속 혹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교육의 개혁주의적 이상을 실현하는 방식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신앙과 교육의 진정한 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교육에 대한 올바른 책임과 권위를 갖기 위하여는 평준화 정책의 폐지 혹은 수정 그 이상이 필요함을 말하였다. 즉, 교육과정 편성과 학생 선발의 자율성이 허용되는 실질적인 기독교학교의 설립과 운영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이 제도를 대학입시에 예속시키지 않고 올바른 신앙교육을 위해 선용하는 교육적 풍토의 필요성도 지적하였다. 또한 평준화 정책이 교육평등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그 정책의 제한적 존속을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평준화 정책이 그 목표하는 바를 더욱 성취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완장치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 참고문헌

- 강상진 (2005) “고교 평준화 정책의 교육효과” *교육개발* 152 호.
- 강영혜 (2005) “평준화 정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준화 정책에 관한 의견 조사 결과” *교육개발* 152 호.
- 강영혜 외 (2005)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여부 III - 학교 교육의 실태와 보완과제” 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김달효 (2003) “고교 평준화 제도 정당화의 재조명” *한국교육* 30 권 1 호.
- 김동석 (2002) “고교 평준화에 관한 정책 주장의 논리 구조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0 권 3 호.
- 김영철 (2005) “평준화 정책과 학교운영의 자율성” *교육개발* 152 호.
- 김태종, 이명희, 이영, 이주호 (2004) “고교평준화 정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 분석”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육개혁연구소.
- 김현진, 최상근 (2004) “고교평준화 제도와 사교육비지출 관계 분석” *한국교육* 31 권 1 호.
- 남기곤 (2005) “경제학 시각에서 본 평준화 정책의 효과” *교육개발* 152 호.
- 류한구 (2005) “평준화 정책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효과” *교육개발* 152 호.
- 성기선 (1999)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교육* 26 권 2 호.
- 성기선 (2002)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과 학력 하향화 현상과의 관련성 분석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2 권 3 호.
- 성기선 (2005) “하향평준화 논의와 학력” 평준화디스커션 그룹 운영 자료집 교육개발원 연구자료 RM2005-21.
- 윤종혁 외 (2003) “고교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 I” 교육개발원.
- 윤종혁 외 (2004)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 II” 교육개발원.
- 이광현 (2005) “PISA 자료 연구를 통한 평준화 정책의 쟁점 분석” *한국교육* 32 권 2 호.
- 이병환 (2002) “학교선택권의 입장에서 고교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향” *교육행정학연구* 20 권 4 호.
- 이주호 (2002) “고교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향” *교육재정경제연구* 11 권 1 호
- 이혜숙 (2006) “평준화/비평준화 고교 수업의 질적 분석과 평준화 정책” *한국교육* 33 권

- 2 호.
- 임준희 (2006) “고교평준화 정책과 교육이해관계자들의 정책연합” *교육행정학연구* 24 권 2 호
- 허종렬 (1994) “부모의 교육권과 국가 교육고권” *새교육* 473 호.
- Christian Reformed Church (1987) *Our World Belongs to God: A Contemporary Testimony*. Grand Rapids, MI: CRC Publication.
- Chubb, J.E. & Moe, T.M. (1990). *Politics, markets, and America's schools*.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 Glassford, D. K. (1991) “The Reformed Doctrine of the Kingdom of God as a paradigm for Formulating and Evaluating Educational program” Ph.D. Dissertation, Marquette University.
- Grand Rapids Christian Schools Association (GRCSA) (1997) Policy Handbook, Grand Rapids Christian Schools Association.
- Jaarsma, C. (1953) *Fundamentals in Christian Education*, Grand Rapids, MI: Eerdmans Publishing Co.
- Kang, Young Taek (2006) “On Public Aid to Christian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A Reformed Christian Approach” *Journal of Research on Christian Education*, 15 (2).
- Plank, D. & Sykes, G. (2003) *Choosing Choice: School Choice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New York: Teacher College Press.
- Stronks, G. G. & Blomberg, D. (1993) *A Vision with a Task: Christian Schooling for Responsive Discipleship*. Grand Rapids, MI: Baker Books.
- Vryhof, S.C. (1994) “Between memory and Vision: Reformed Christian Schooling in America,”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 Wolterstorff, N. (2002) *Educating for Life*, Grand Rapids, MI.: Baker.
- \_\_\_\_\_. (2004) *Education for Shalom*, Grand Rapids, MI.: Eedermans.